

전북 유통 중인 가금류 시 검사 '음성'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도내 재래시장에서 유통 중인 가금류에 대해 예찰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지난 12월 30일 밝혔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12월 7~29일 도내 재래시장 28곳에서 유통 중인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7건에 대해 검사했다. 도는 올해 5차례에 걸쳐 가금류를 사육하는 968 농가에서 총 2만2천건의 AI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판정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축산연구소는 "닭과 오리 등의 폐사율이 갑작스럽게 높아지고 산란율이 저하되면 축산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2011.12.30

충북도, 2012년도 가축방역사업 큰폭 확대...방역체계 개선

충북도는 2011년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방역에 소요되는 예산도 전년도 86억원에서 2012년도에 11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구제역을 포함한 18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64억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10억 등 21개 사업을 시행하며, 또한 농가별 소독시설 지원 250개소에 8.5억원,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 6억, 구제역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2.6억을 신규로 투자한다.

한편, 가축방역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미예방접종 유형의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전국적으로 가축 또는 축산관련차량의 일시정지제도가 도입되며, 기존 길거리소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군별 3~5개소의 거점소독소를 운영한다.

또한 가축거래상인, 축산관련차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제를 시행하며, 공동방제단은 기존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을 축협에서 운영하여 정예화한다. 전업농가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며 2015년부터는 50㎡이상 규모까지 확대하여 모두 허가대상에 포함되며, 가축방역일지 기록을 의무화 된다.

도는 향후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100%예방접종에 중점을 두고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는 계열화업체, 부화장, 도축장을 통한 일괄 모니터링 등 상시예찰을 추진하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야생조수 접근방지대책과 철새 서식지 출입제한을 포함한 농가별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충청북도청 2011.12.30

진주시, 2011년 가축방역시책 평가 '전국 최우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기관표창'과 포상금 받아

경남 진주시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1년도 가축방역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가축방역시책 평가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 브루셀라 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방

역추진 성과와 추진실적 등을 종합해 실시됐다. 진주시는 구제역 방역추진 실적, 소 브루셀라병 검사율과 발생 감소율,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양 성율, 닭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캐슬병 방역 등 전 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진주시는 매주 수요일을 축산농가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모든 축산농가가 동시 소독토록 하는 한편 소규모 축산농가와 방역취약지역에는 32개 공동방제단과 시 보유 방역차량으로 집중 소독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을 휩쓸 당시 시는 발 빠른 대응으로 고속도로 나들목 5개소와 일반국도 4개소 등 모두 9개소에 방역통제소를 설치해 신속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한 건도 발생치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희경 기자 2012.01.01

인공위성 이용 야생조류 거동조사 및 AI 전파 연구 실시

여름철새인 저어새는 서해연안에 머물다가 중국 남부로 이동한 것으로 관찰됐다.

또한, 과학원이 야생동물의 축사접근을 확인하기 위해 HPAI 발생 축사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관찰한 결과 지금까지 총 10종의 야생동물이 축사 주변에 출현 또는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까치, 사육오리, 멧비둘기, 등줄쥐, 멧돼지, 너구리 등의 축사출입 사례가 확인됐으며 참새, 고양이, 고라니는 축사에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

사 주변에서는 원앙, 박새 등이 관찰됐다.

과학원은 추적 개체가 이동한 서식지 주변에 농가와 축사가 산재해 있어 야생조류와 가금간의 AI 전파차단을 위해 겨울철새의 생활권 안에 있는 축사에 대한 밀폐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과 가금 간의 접촉 및 AI 순환전파가 없도록 축사의 밀폐관리가 필요하며 축사주변을 잘 관리하여 야생동물 접근을 막아야 한다.

축사주변에 낙곡 및 사료, 가금의 분변이나 깃털 등이 없도록 하고 주변의 잡풀과 관목을 정리하여 야생동물의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

과학원은 향후 HPAI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야생조류를 선정하는 등 흑한기 AI(조류인플루엔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학원은 관련 자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지자체 등에 제공하여 HPAI 방역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위성 위치추적과 무인카메라 조사를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2012.01.05

농식품부 올해 축산분야 예산 1조4천204억원

FTA 보완대책 3천42억 · 축발기금 908억 증액
생산시설현대화자금 금리 3%서 1%로 하향조정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규모가 총 15조4천8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축산분야는 1조4천204억원이다. 또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증

액한 규모는 3천42억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현대화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융자지원 금리를 3%에서 1%로 낮췄다. 특히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사업규모를 908억원 증액했으며, 특히 최근 수급불안으로 하락하고 있는 소값의 가격 안정을 위한 암소도태자금(3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와 함께 농협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금은 현물출자 1조원을 추가하여 총 5조원(자본출자 3조원+현물출자 2조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2012. 01.04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6106억 2500만원 투입...

융자금리 1%로 단서조항 이행 못할 땐 사업비 반납해야

보조·융자 함께 받는 경우 지원한도액 한·육우 2억

가축계열화사업 개보수 지원 농가 지원 대상 제외 무허가축사는 사업 후 허가 받고 무창돈사 갖춰야 한미FTA 대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본격화 된다.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해 축사 및 축사시설 등을 개선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2017년까지 한우·돼지·닭·오리·젓소·흑염소·꿀벌·양육 축종의 축사시설을 현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필수이행조항같은 단서가 달렸다는 점에서 선택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올해 농림사업시행지

침에 따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총 6106억2500만원으로 보조 1035억원, 융자 1725억원, 이차보전 2125억원, 자부담 1224억2500만원 등이다. 이중 이차보전과 농가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은 2760억원 가량으로 전년 예산보다 1187억원 가량이 늘어났다.

지원시설은 축사와 축사시설 그리고 방역시설 및 퇴비사 등을 포함한 축사부대시설 등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시설도 지원된다.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산란계는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등록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인 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과 건축물 등은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보조와 융자가 포함되는 방식의 경우 보조 30%·융자 50%(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자부담 20%이며, 이차보전방식은 융자 80%(연리 1%, 3년 거치 7년 상환)·자부담 20%며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축종별 전업농 이상이며,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보조와 융자의 현행방식과 융자만 받는 이차보전방식 대상자로 구분한다. 현행방식의 경우 현행지원한도 규모 내 농가를 지원하되 구랍 31일 이전 축산등록면적까지만 지원된다. 전업농 미만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들 농가가 전업농규모로 축사를 확대할 때는 전업규모(현행 방식 상한액의 50% 이내)까지 지원한다.

▲전업농 기준과 한도액은=전업농 기준은 △한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만수 이상(육용종계 1만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만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만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육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이며,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해 산정한다.

보조와 용자를 함께 받는 경우 지원한도액은 △한육우 2억원 △양돈·산란계·육용종계 10억원 △육계 7억원 △부화장 12억원 △낙농 3억원 △흑염소·꿀벌·양육 1억2000만원이며, 용자만 받는 경우 축종별로 지원 상한액이 최대 50억원으로 설정됐다. 또 보조 없이 용자만 지원받는 경우에는 용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낮춘다.

▲제외대상과 이행사항=축산시설현대화(폐사축·방역시설 및 생산성 향상 시설)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하는 농가, 가축계열화사업 주체의 직영시설, 축사 내 일부 무허가축사가 있는 경우(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된다. 하지만 일부 무허가축사가 포함돼 있더라도 축산업 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무허가축사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며, 다만 시설현대화사업 이후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는 반드시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농장 정문 입구에 출입차량 소독조 △방역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해야 한다. 또 지원을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택 신중히=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지원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장점도 있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는 단서조항이 많기 달려 있다는 점에서 선택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무허가축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축산농가들이 사업신청을 하기에 더 답답해 할 것으로 판단, 무허가 시설이 있더라도 일단 축산업 등록제 기준으로 지원한다”면서 “하지만 사업 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돈의 경우 “악취문제 등으로 인해 무창돈사를 짓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것도 민원 때문이며, 따라서 인근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농가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해 무창돈사를 짓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신청 전이나 사업자 선정된 후에도 실제 증개축 보수 등에 들어가기 앞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양돈의 경우 무창돈사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시설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과 지역민원 등으로 인해 축사시설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용자 규모와 향후 수익성 등을 철저히 따져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은 농식품부가 이달 말 지자체에 신청접수된 것을 넘겨 받아심사한 후 2월 중순 사업자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2012.01.09

1억이상 '고소득 농업인' 늘었다

전남도, 지난해 2753농가...전년보다 37% 증가

지난해 전남도내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농업인이 2753농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AI,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가 경영이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014명보다 무려 739명(37%)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역대 고소득 농가가 크게 증가한 것은 농가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도·시군의 친환경농축산업 육성, 품목별 조직화·규모화, 1시군 1유통회사 육성정책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 중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수가 2010년 575농가(전체의 29%)에서 지난해 942농가(전체의 34%)로 늘어나면서 친환경농업이 고소득농업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을 올린 농가는 분야별로 축산이 46.1%인 126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식량작물과 채소분야가 각각 27.8%와 11.2%인 765명과 308명, 그 뒤로 과수 142명, 가공·유통분야는 4.3%인 118명, 특용작물 51명, 화훼 30명 순이었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82.4%인 2270명,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473명이며 1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업인도 10농가나 됐다. 시군별로는 영암군이 302농가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고흥군이 253농가, 나주시 224, 강진군 223, 해남군 202, 영광군 202, 무안군 200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5000만원 이상 농가도 2010년 4725농가에서 지난해 6180농가로 31% 늘어나는 등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고소득 농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오는 2014년까지 고소득 농업인 1만명 육성을 위해 기존 농림사업과 연계한 농가별 맞춤형 지원 및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경영교육,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잠재 고소득농가 3427농가에 대해서 영농기술교육 및 경영교육, 전담 자문제 등을 통해 역대 고소득농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축산 무안=안춘배 기자 2012.01.11

국내산이라던 ‘오리고기’...“알고보니 중국산”

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8건 적발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모음 식점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내 대형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8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월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국산 오리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비롯해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한 사례 등 모두 8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5건, 원산지 미표시 3건 등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이를 사법조치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도 통보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산 농수축산물의 부정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시 권과 서귀포시권으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대형호텔과 음식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특산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끔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기자 2012.01.13

한·육우·오리↓ 돼지·산란계·육계↑ 통계청 4/4 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가축사육두수는 전분기보다 한·육우, 오리는 감소하고 돼지, 산란계·육계는 증가했다.

1월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와 육우 사육두수는 295만마리로 전분기보다 9만 4000마리(3.1%) 감소했다. 이는 지속적인 산지 가격으로 한우와 육우의 사육을 포기한 농가가 늘어난 데다 계절적 요인으로 송아지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돼 모돈 및 생산두수가 증가하고 재입식 농가가 늘어난 돼지는 전분기보다 38만 8000마리(5.0%) 늘어난 817만 1000마리로 집계돼 구제역 여파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71만 두(17.3%)가 모자란 수준이다. 젓소는 40만 4000두로 전분기와 동일했고 산란계는 계란 가격 호조 덕분에 전분기보다 121만3000수(2.0%) 증가한 6242만 5000수, 육계는 전분기보다 539만 7000수(7.6%) 늘어난 7643만 5000수로 집계됐다.오리는 1273만 5000수로 전분기보다 19만수(1.5%)가 감소했다.

축산경제 신문 이혜진 기자 2012.01.13

오리값 내리막 새끼오리 400원선 최근 3년 사이 최저

오리 가격 하락이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국오리협회가 지난 1월 11일 조사한 오리 시세에 따르면, 오리 가격은 새끼오리 400원, 생체오리(3kg 기준), 신선육·토치육(2kg 기준)은 각각 6800원과 7000원 수준. 연초부터 가격 추락이 두드러져 올해 경기 전망 역시 어두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지난해 AI 여파로 F1오리에서 생산된 불법 새끼오리 입식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공급과잉이 일어난 데 따른 것. 현재 냉동재고는 역대 최고인 약 1200만수로 추정되고 있어 가격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암장 등 10개 계열업체들이 자정 노력을 통한 수급 안정에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협회도 F1오리 사육 및 불법 부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는 동시에 F1오리에서 생산된 새끼오리 입식 자제와 육용오리의 도축 제한을 거듭 강조하며 수급 안정에 나서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12.01.19

배합사료업계, 가격인상 자제 축산농가와 공생...긴축경영으로 어려움 흡수

소값 뿐만 아니라 오리값 등도 폭락사태에 이르자 배합사료업계가 사료값 인상을 자제하고 나섰다. 배합사료업계는 지난해 9월말부터 사료값 인상을 검토했으나 축산환경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기회요인보다는 위협요인이 더 많다는 판단 아래 사료값 인상을 억제해 왔다. 그런 가운데 널뛰기 환율에다 옥수수 등 주요 사료원료 국제가격이 높은 시세 형성으로 경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축산농가와와 고통을 분담하고 공생한다는 차원에서 긴축 경영으로 어려움을 흡수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모 사료기업은 연초에 사료가격 인상 단행을 거듭 밝혔음에도 결국 사료값 인상을 하지 못하고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비단 이 기업만이 갖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사료시장은 축산사양 현장이기 때문에 축산농민을 먼저 살려놓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 사료업체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료기업들의 사료값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2012.01.18

정부, 축산업허가제 세부 기준안 마련 돌입 가축사육 위치기준 가이드라인 정하기로

지자체 임의로 제한거리 확대 못하도록 근거 마련

지난해 말 축산업 허가제 도입 내용이 포함된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세부 기준안 마련에 착수했다. 축산법 하위 법령에 담길 세부 기준안은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소독 및 방역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사축처리 등의 축사시설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축산업 허가가 이뤄진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17일 축산업 허가제 관련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 팀장은 이천일 농식품부축산정책과장이 맡았으며, 팀 내에는 △소분야(한·육우, 낙농업) △돼지분야(중돈·정액처리업, 양돈업) △가금분야(부화·종계·종오리업, 육계·산란계·오리업)로 나눠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해당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T/F에서는 축산업 허가제 관련 세부 허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축종별·사육규모별 소독 및 방역시설, 분뇨처리시설, 환기시설, 폐사축처리, 울타리 등 축사에 대한 시설기준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지자체가 임의대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농식품부는 위치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선 지자체에서 축산업 허가제 적용에 필요한 허가기준 해설서를 제작·보급하는 한편, 축종별·사육규모별 농가 등이 이수해야 할 적정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운영기관의 지정요건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T/F 내 과제별 실무회의를 월 2회 이

상 개최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오는 3월 말까지 축산업 허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설기준, 위치기준 교육이 수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허가기준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후 축산업 허가기준과 관련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12.01.23

무인헬리콥터 이용 AI 방제 철새 도래지 5곳 시범추진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철새 도래지 5곳에서 무인헬리콥터를 이용한 항공방제를 시범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AI 특별방역기간인 4월까지 충남 서산 천수만, 천안 풍서천·병천천, 아산 곡교천, 전남 영암 영암호 등 철새 도래지 5곳에서 무인헬기 10대를 동원해 하천변과 인근 논밭 주변을 주 1회 항공방제 한다고 밝혔다.

AI 항공방제는 농식품부가 그동안 국내에서 4차례 발생한 고병원성 AI 역학조사 결과 야생조류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특별방역기간인 1월부터 4월까지 15차례 이뤄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항공방제 전후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철새의 분변을 채취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AI 항원을 검사하며 효과 분석을 통해 ‘2012년 AI 특별대책기간 운영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농민신문 박상규 기자 2012.02.27

